

차관회의 부처보고

---

# 「2016 비정상외 정상화」 추진계획

---

2016 3. 31.

국무조정실

# 목 차

I. 추진 경과 .....	1
II. 2016년 정상화 추진과제 .....	2
III. 향후 계획 .....	4

## < 참 고 >

붙임1.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안) ....	5
붙임2.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과제(안) ....	6
붙임3.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신규과제(안) ....	8
붙임4.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종료과제(안) ..	12
붙임5.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주요 성과 .....	14

## I. 추진 경과

-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가 핵심 어젠다로 선언('13.8.15)
- 범정부 추진계획 확정 및 1·2차 정상화과제(245개) 선정·추진('13.12~)
  - 중기중앙회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굴하여,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14.11)를 통해 개선
- 부처별 정상화 성과를 '14년도부터 부처평가에 반영
  - \* ('14년) 25% → ('15년) 10% → ('16년) 10%
- 2015년 정부핵심과제 선정·추진
  - '4대분야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15.4~)
    - 기존과제(245개)를 '정부핵심 과제'와 '부처관리 과제'로 개편
    - 부정부패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 추가(25개)
  - 100대 과제 중 민생관련 집중관리과제\*에 대한 민관합동TF 구성, 이행상황 점검·제도개선 등으로 성과 체감도 제고('15.7~)
    - \* 보이스 피싱 근절, TV 홈쇼핑 불합리 관행개선,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 < '15년 정상화 주요성과 >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추진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절감 등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 어린이집 부정수급 근절 대책 내실화, 농업 난방용 면세유에서 경유 제외 등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 대폭 축소
- 대·중소협력사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결제관행 개선, 홈쇼핑 납품거래 안정성 강화 등 시장질서 정상화
- 자동차 이력정보 조회를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방지, 이동 통신요금 할인 확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불합리 개선

## II. 2016년 정상화 추진과제

- ◇ 국정과제와 중복과제,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정부핵심 과제에서 제외,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로 대체(21건)
- ◇ 파급효과·홍보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관리과제(15건)로 선정·추진  
⇒ 100대 정부핵심 과제체제는 유지하되 체감효과 제고

### 1. 100대 정부핵심과제 수정·보완

- (유사·중복과제) 국정과제와 유사성이 많은 중복과제(4건)는 정부핵심과제에서 제외, 관련성이 높은 과제는 통합(4건→2건)
- (완료과제) 단기과제 및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15건)는 부처 관리과제로 이관하되, 연말 정상화과제 평가를 통해 지속관리  
\* 현장문화 미정착, 언론 이슈화 지속 등 계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유지
- (신규과제) 부처(129건), 수요자 단체(40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21건)

☞ 100대 핵심과제는 반기별 점검 및 연말 평가를 통해 관리

### 2. 중점관리과제 선정·추진

- 100대 핵심과제중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파급효과·홍보효과가 큰 과제를 '16년 중점관리과제로 선정(15건), 추진

☞ 중점관리과제에 대해 분기별 점검, 점검결과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민관합동 TF 구성, 심층분석 실시

☞ 중점관리과제 중심으로 개선과제 발굴,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개최(반기별)하는 등 「비정상외 정상화」의 국민관심도 제고

\* 수요자 단체, 국민제안, 권익위 신고 등을 통해 건의과제를 발굴

## 100대 정부핵심과제 분야별 주요내용

### ① '공공부문 개혁' 분야 (19개)

- 방산비리 근절 및 투명성 강화, 기상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국민신문고 민원기피 행태 개선 등 기존과제 보완·추진
-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재외공관 예산·행정 업무 운영 개선, 신고 민원처리 제도개선 등 신규과제 발굴

### ② '법질서 세우기' 분야 (28개)

-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관행 개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 등 지속 추진
- 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보훈·위탁병원 진료체계 개선 등 신규과제 발굴

### ③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분야 (37개)

-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항공권 환불 거절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등 지속 추진
-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식 개선,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등 신규과제 발굴

### ④ '국민안전' 분야 (16개)

- 불량식품 척결,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긴급 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긴급 신고전화 통합,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관행 근절 등 기존과제 보완·추진
- 어선 등 선박의 안전관리기준 강화, 신종마약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선박·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상서비스 지원강화 등 신규과제 발굴

### Ⅲ. 향후 계획

---

#### □ 과제 관리 및 평가

- (정부핵심 과제) 국조실 중심으로 반기별 점검(중점관리과제는 분기별), 심층 분석(중점관리과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100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연말 평가(10점)를 실시하되, 중점관리과제 추진 관련 부처에 가감점 부여 추진
- (부처관리 과제) 소관부처에서 후속조치를 지속 관리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부처평가에 일부 반영
  - '16년 신규 이관과제 등 이관과제 추진현황 관리 강화
    - \* 이관과제는 '15년 160건, '16년 15건으로 총 175건임

#### □ 비정상의 정상화 홍보·확산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 성공사례 발굴 다양한 매체\*를 활용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추진
  - 중점관리과제를 중심으로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계기 집중 홍보 및 테마별 홍보 추진
    - \* 활용가능 매체 : 전광판, 버스모니터, 간행물, 유튜브, SNS 등
- 정상화 포털사이트(www.normal.go.kr)를 통해 국민에게 과제별 이행상황을 공개, 국민제안·건의 수렴 활성화로 쌍방향 소통 강화
- 지자체의 자체과제 발굴·추진 및 합동평가 반영을 통해 적극적인 정상화 참여 유도
  - \* 지자체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 '17년 평가지표 반영(행자부 협조)

※ ■ 기존과제 ■ 신규과제

유형	정상화 과제	부처	유형	정상화 과제	부처
70 70 부패 개혁	1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조달/기재	투 명 하 고 공 정 안 사 회 구 연	51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국토부
	2 지방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행자부		52 학자금 이종지원 방지	교육부
	3 재외공관 예산·행정 업무 운영 개선	외교부		53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세탁 및 부당특혜관세 근절	관세청
	4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개선	기재부		54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국토부
	5 협업을 통한 국가통계 품질관리 강화	통계청		55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복지/공정
	6 방산비리 근절 및 투명성 강화	방사청		56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여가/공정
	7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문화재청		57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복지/공정
	8 공공기관-공공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수사 강화	법무부		58 선행교육 근절	교육부
	9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	국방부		59 제3국 출생 탈북민자녀 지원 제도 개선	통일부
	10 기상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기상청		60 일용근로자 소개요금 법정비율 준수	고용부
	11 사공유지 무단점유 개선 및 미활용 군용지 정리	국방부		61 항공원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국토부
	12 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권익위		62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경찰청
	1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	권익위		63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교육부
	14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공정/국토		64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계층 입주 개선	국토부
	15 공직사 퇴직 후 제직업 관행개선	인사처		65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부과방식 합리적 개선	복지부
	16 신고 민원처리 제도 개선	법제처		66 파산자 등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 정비	법무/중기
	17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위		67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교육부
	18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인사/행자		68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국토/금융
	19 국민신문고 민원기피 행태 개선	권익위		69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공정위
법질서 세우기	20 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	복지부	70 전자상거래 분야 IT 신성장분야 등 불공정관행 개선	공정위	
	2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복지부	71 체육단체 및 체육계 불공정·불투명성 개선	문체부	
	22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고용/경찰	72 방송 외주제작협찬거래 시 불공정 관행 개선	방통위	
	23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관행개선	복지부	73 불량부정 농업자재 유통 근절	농진청	
	24 농업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면세유, 직불금 등)	농식품/해수/선민	74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식 합리적 개선	환경부	
	25 정부 R&D 특허의 개인소유, 중복제출 등 관행 근절	특허/미래	75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통한 수입품 가격저렴 제기	관세청	
	26 R&D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산업	76 휴대폰인터넷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관행 근절	미래/방통	
	27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방지	복지부	77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병역면탈행위 근절	병무청	
	2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기재/법무	78 문화예술 영역의 불공정관행 개선	문체부	
	29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	국세/관세	79 법조브로커·상표브로커 등 전문분야 비리 근절	법무/특허	
	30 4대보험료 교액·장기 체납 근절	복지/고용	80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정/매장/방통	
	31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척결	경찰/국토	81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공정위	
	32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등 관행개선	고용부	82 화물운송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	국토부	
	33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경찰/안전	83 인력파견기업-사용사업주간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고용부	
	34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국토부	84 중소기업사에 대한 거래·협력 관행 개선	산업부	
	35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행위 근절	농식품/문체	85 긴급구조·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안전처	
	36 온라인상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방통위	86 여객버스 위험운행 관행 개선	국토부	
	37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근절	복지부	87 긴급 신고전화 통합	안전처	
	38 보훈·위탁병원 진료체계 개선	보훈처	88 어선 등 선박의 안전관리기준 강화	해수부	
39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	산림청	89 해양안전 저해행위 근절	안전처		
40 생활주변의 풍속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경찰청	90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안전처		
41 기업형 조폭 및 중소상공인 갈취사범 근절	경찰청	91 식품·수산물 위생안전 관리기준 위반 등 근절	식약/해수		
42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환경부	92 신종마약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세청		
43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대처	법무/경찰	93 선박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한 가상서비스 지원강화	기상청		
44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복지/공정	94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케이블 정비	미래/산업		
45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근절	공정위	95 불량식품 척결	식약/관세		
46 디운계약서 작성 부실감정평가 등 부동산거래 관행 개선	국토부	96 중국어선 불법 조업 행위 근절	안전처		
47 부패나 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손실 철저 환수	법무부	97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	환경부		
48 보험 사기·범죄 근절	금융/경찰	98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	해수부		
49 보이스피싱, 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금융/경찰	99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환경부		
50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방지	금융위	100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	행자부		

■ 부처별 과제 현황

부처명	과제수	부처명	과제수	부처명	과제수	부처명	과제수	부처명	과제수	부처명	과제수
기재부	3	행자부	3	여가부	1	안전처	6	조달청	1	산림청	2
교육부	4	문체부	3	국토부	11	인사처	2	통계청	1	중기청	2
미래부	5	농식품부	2	해수부	4	법제처	1	병무청	1	특허청	2
외교부	1	산업부	3	방통위	4	보훈처	1	방사청	1	기상청	2
통일부	1	복지부	10	공정위	11	식약처	2	경찰청	9	행복청	0
법무부	6	환경부	4	금융위	4	국세청	1	문화재청	1	새만금청	0
국방부	2	고용부	5	권익위	3	관세청	5	농진청	1	원안위	0

**붙임 2**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관리과제(안) [15개]**

연번	과제명	선정사유	비고
1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조달청,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과제</li> <li>- 발주기관의 특정 규격제품 납품 강요, 불공정·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 조달물품 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공공 조달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li> <li>* 지난해 소방용 특수방화복 검사 부실 등이 사회 이슈화</li> </ul>	공공 개혁
2	다운계약서 작성, 부실감정평가 등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화 미착근 등 국민체감도 제고 필요 과제</li> <li>- '06실거래 신고제도 시행이후, 분양권 등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 및 단속강화('15년) 등에도 불구하고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관련 비정상 관행 지속</li> <li>* 중개사 58%가 다운계약을 요구받거나, 직접작성 경험(감정원, '15.4)</li> </ul>	법질서
3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등 관행개선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화 미착근 등 국민체감도 제고 필요 과제</li> <li>- 소액 체당금 제도 시행('15.7), 사업장 감독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은 아직 높은 수준, '꿈수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착취' 등 비정상적 임금체불 관행 여전</li> <li>* 임금체불액(억원): ('13) 11,930 → ('14) 13,195 → ('15) 12,993</li> </ul>	법질서
4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관행개선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과제</li> <li>- 관행적으로 병·의원 등이 진료비를 거짓·과다 청구하여 환자의 금전손실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li> <li>*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서 부당청구에 따른 의료인·의료 기관에 대한 처벌 등을 가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은 다소 미흡</li> </ul>	법질서
5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복지부, 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과제</li> <li>- 무자격자의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개설 및 영리목적의 운영 등으로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우려</li> <li>* (사무장병원 적발) ('10) 46 → ('12) 186 → ('15) 220건</li> </ul>	법질서
6	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밀접분야로 홍보효과가 큰 과제</li> <li>- 고령화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야간시간 사고 대응체제 미흡, 구강관리를 위한 치과축탁의 자격 부재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한계</li> <li>* 야간인력 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치과 축탁의 활동 근거 미비 등으로 시설 노인 구강건강관리 한계 등</li> </ul>	법질서
7	항공권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밀접분야로 홍보효과가 큰 과제</li> <li>-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저가 항공 이용자도 늘어나면서 저가 항공이용 소비자 피해가 급격히 증가, 저가 항공의 사고 빈발로 국민 불안감 고조</li> <li>* 일부 저가 항공사 항공기 결항시 공항도착 순서대로 대기표 지급, 국민불편 야기(대형 항공사는 예약시간에 따라 자동 수속)</li> <li>* 국토부는 저가 항공사의 잦은 사고가 충분한 조종 인력과 대체 부품 미확보로 인한 것이라 발표('16.1)</li> </ul>	투명 공정 사회
8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여가부, 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밀접분야로 홍보효과가 큰 과제</li> <li>-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예식장 개방, 작은 결혼식 서명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 중이나, 국민체감 성과는 낮아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li> <li>* '15년 정상화과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가 3.72점으로 현저히 낮게 평가(평균 4.25점)</li> </ul>	투명 공정 사회

연번	과제명	선정사유	비고
9	방송 외주제작 협찬거래 시 불공정 관행 개선 (방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밀접분야로 홍보효과가 큰 과제</li> <li>- 방송사가 협찬 대가로 협찬주 상품 홍보, 협찬주에 유리한 내용 구성 등 방송의 객관성·공정성 훼손 사례 지속 발생</li> <li>* 000방송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협찬주를 언급 또는 노출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유발(1,000만원 과태료, '15.9월)</li> <li>-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계약 관행 지속 등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품질 저하 우려</li> <li>*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는 제작사는 18.5%('14년 기준)</li> </ul>	투명 공정 사회
10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정위, 미래부, 중기청, 방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밀접분야로 홍보효과가 큰 과제</li> <li>- TV 홈쇼핑사들이 납품기업을 대상으로 판촉비용 전가, <b>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 행위 지속</b></li> <li>- 최저가, 초특가 등의 문구사용으로 불필요한 구매 및 제품효능 오인 유도로 소비자 불만 증가</li> <li>* 홈쇼핑 표시·광고 방송관련 상담건수: ('12) 425 → ('15) 1,301</li> </ul>	투명 공정 사회
11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협력 관행 개선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화 미착근 등 국민체감도 제고 필요 과제</li> <li>- 그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2·3차 협력 업체들에 대한 동반성장혜택 확산 필요성에 대한 요구 지속</li> <li>* 산업부는 2·3차 협력사의 자금흐름 원활화를 위해 '상생결제 시스템'을 '15년에 도입, '16년 제도 정착 추진 예정</li> <li>- 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자간 성과공유제'의 본격 확산 필요</li> </ul>	투명 공정 사회
12	체육단체 및 체육계 불공정·불투명성 개선 (문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과제</li> <li>- 체육단체의 불합리한 운영, 조직사유화, 비리 등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번히 발생</li> <li>- 국가대표 선발, 대학입시 등에 있어서 체육인들의 비리가 사회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li> <li>* 최근 대한수영연맹 간부의 비리 의혹이 보도(PD수첩, '16.3.15)</li> </ul>	투명 공정 사회
13	불량식품 척결 (식약처,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과제</li> <li>-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합동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는 여전히 상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우려</li> <li>* 깨진 계란('15.2), 대장균 떡볶이 떡('15.7) 유통 등 적발</li> <li>- 통관후 원산지 국산 둔갑 등 불법적인 식품유통에 따른 국민의 먹거리 불신 심화</li> </ul>	국민 안전
14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밀접분야로 홍보효과가 큰 과제</li> <li>- 친환경 제품 특히 가구업계의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 및 신뢰도 저하 우려</li> <li>* 친환경 표시·광고 제품 모니터링(500건) 결과, 63건이 위장 제품(이중 46건이 가구유통 최저조건을 친환경으로 표시)</li> </ul>	국민 안전
15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밀접분야로 홍보효과가 큰 과제</li> <li>- 폐수배출 오염농도를 자동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임의 조작 사례 발생 등으로 수질 원격관리 한계</li> <li>- 염소화합물 등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배출 허용기준이 미설정되어 관리 사각지대 발생</li> </ul>	국민 안전

**붙임 3**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신규과제(안) [21개]**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비고
1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조달청, 기재부)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기관에서 특정 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제하여 공정 입찰 저해</li> <li>물품 구매와 설치가 혼합된 계약시 통합발주, 과도한 계약 보증금 요구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입찰 자격 제한</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매규격 사전 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 발주 사업에 확대(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li> <li>물품 제조와 설치가 혼합된 계약의 발주기준 마련, 계약 보증금 분할 납부, 1회 최대 납품요구량 합리화 등 계약보증금 제도 개선</li> </ul>	공공 개혁
2	재외공관 예산·행정 업무 운영 개선 (외교부)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외공관 예산·회계업무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규정 위반사례 발생</li> <li>체계적 인사복무·관리 시스템 및 교육 미비로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잦은 이직·소송 제기 등 외교업무 수행에 차질 초래</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담당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실시, 맞춤형 매뉴얼 개발 및 현지 감사 강화</li> <li>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련 인사 운영 선진화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li> </ul>	공공 개혁
3	협업을 통한 국가통계 품질관리 강화 (통계청)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 공표시 조사설계, 자료처리, 분석 등 세부 품질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통계 이용의 불편 초래 및 오용 우려</li> <li>통계작성기관의 표준화된 통계생산편람 부재로 업무 노하우 축적 및 체계적 업무추진이 어려움</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개요부터 통계제공까지 10단계별 품질지표에 따라 작성된 '통계정보보고서' 기반의 정기 통계품질 진단 실시</li> <li>통계정보보고서의 다목적 활용(통계생산 표준편람, 이용자 가이드북 재구성 및 서비스 등)</li> </ul>	공공 개혁
4	신고 민원처리 제도 개선 (법제처)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제도 관련 법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해석 및 부당한 법집행 행태 발생</li> <li>* 신고민원에 대한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 소극적·비정상적 업무 행태로 규제개혁 저해 결과 초래</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법령규정 전수 조사를 통해 신고 유형에 따른 규정 구체화 명확화</li> <li>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및 결과통지 의무를 법령에 명시</li> </ul>	공공 개혁
5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척결 (경찰청, 국토부)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단가 상승, 국민에게 부담 전가</li> <li>불법 하도급 및 집단행동을 통한 부당한 압력으로 공정한 거래관계 훼손</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부정부패 척결 '핵심 단속테마'로 선정, 집중단속 추진</li> <li>'부정부패 수사전담팀' 재정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li> </ul>	법질서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비고
6	부패나 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손실 철저 환수 (법무부)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손실 환수 소송이 소관 검찰청 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여 총력 대응 미흡</li> <li>○ 형사판결 확정 시 까지 소송 제기를 보류하는 관행으로 소멸시효가 끝나는 경우 발생</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청별로 수행하던 소송을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으로 집중</li> <li>○ 국고손실 환수 사례 발굴 및 소송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반기) 등</li> </ul>	법질서
7	정부 R&D 특허의 개인소유, 중복제출 등 관행 근절 (특허청, 미래부)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R&amp;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소속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명으로 소유하는 비정상 관행 발생</li> <li>○ 출원 후 해당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경우 등록성과는 다른 과제의 성과로 중복 제출하는 등 특허성과의 과제 불일치 사례 발생</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R&amp;D 특허성과의 부당 개인 소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li> <li>○ 특허성과 수집체계를 단일화하여 이중성과 방지 및 연구자 부담 완화</li> </ul>	법질서
8	보훈·위탁병원 진료체계 개선 (보훈처)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가 국가유공자 명의로 의료비 부정수급 개연성이 있으나 관련제도 개선 미흡</li> <li>○ 위탁병원 진료 관리 한계 및 진료비 착오청구로 예산누수 발생</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 혈관을 이용한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으로 중복·허위 진료 방지</li> <li>○ 위탁병원 적정진료체계 강화 및 진료비 청구내역 심사 강화</li> </ul>	법질서
9	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 (복지부)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하위기관 퇴출 기준 부재 및 기관간 서비스 품질 편차 존재</li> <li>○ 입소시설에서 치과의사를 촉탁의로 둘 수 없어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 부실</li> <li>○ 야간시간대 사고 대응 및 상시보호를 위한 근무 체제 기준 불명확</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보완, 서비스 표준 매뉴얼 마련</li> <li>○ 치과의사를 촉탁의로 추가할 수 있도록 촉탁의 자격 제도 개선 및 주기적 구강건강 관리</li> <li>○ 야간시간대 관리 인력 1인 필수 배치 및 규모별 추가 배치</li> </ul>	법질서
10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부과방식 합리적 개선 (복지부)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 시 연체금을 월할 계산하여 연체 후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이 과중</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체금 계산을 일할 방식으로 개선</li> </ul>	투명 공정 사회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비고
11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 (교육부)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 미비로 '학자금 이중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 부족(감사원 지적사항)</li> <li>* 학자금 이중수혜자 총 33,538명, 332억원 발생 (15.12월말 기준)</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등이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미참여 시 제재조항(과태료) 신설 (관련 법 개정)</li> <li>이중지원 방지 전담조직 운영 및 학자금 지원 현황조사</li> <li>미참여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점검 및 설명회 실시(계속)</li> </ul>	투명 공정 사회
12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지원 제도 개선 (통일부)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불가</li> <li>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지원제도 미흡</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적취득 관련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사실관계 확인서 발급</li> <li>자녀 양육 가산금 지급을 위한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li> </ul>	투명 공정 사회
13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식 합리적 개선 (환경부)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작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검사 시 실내 인증 조건하에 적합성 검증 방식 운영으로 배출가스 인증기준 초과 사례 발생</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방식 개선을 위한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li> <li>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li> </ul>	투명 공정 사회
14	방송 외주제작 협찬거래 시 불공정 관행 개선 (방통위)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상파방송사가 외주제작사와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시 표준 계약서 미사용, 구두 계약 등 불명확한 관행에 의존</li> <li>협찬 대가로 협찬주 상품 홍보, 협찬주에게 유리한 내용 구성 등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저해 사례 발생</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상파방송사 방송평가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력평가 항목 신설 등을 통한 정상화 여건 조성</li> <li>협찬고지 모니터링 및 제재처분 강화, 방송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 의무부과, 협찬주의 제작 또는 편성 개입 금지 의무 마련 등</li> </ul>	투명 공정 사회
15	불량·부정 농업자재 유통 근절 (농진청)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수농약은 저가로 은밀히 유통되고, 약효 및 안전성 검증이 확인되지 않아 농업인의 경제적 피해 및 국민건강 위협</li> <li>비료, 유기농업자재 업체는 영세하고 자체 품질관리 능력이 미흡하여 불량제품이 계속 발생</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수농약 등 불법 유통농업자재의 단속 강화</li> <li>부정불량 농업자재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li> </ul>	투명 공정 사회
16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미래부, 산업부)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곳곳에 난립한 전선·통신선(공중케이블)은 보행자안전 등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 훼손</li> <li>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늘어진 케이블, 장마철 감전사고 원인이 되는 폐·사선 등 관련 민원 지속 증가</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케이블 정비 투자규모 확대,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li> <li>지중화사업 활성화, 기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효율화</li> </ul>	국민 안전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비고
17	해양안전 저해행위 근절 (안전처)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과적·과승, 해상교통방해, 음주운항 등 각종 안전사고 계속 발생</li> <li>○ 안전 경시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 발생 * 세월호 사고, 오룡호(어선) 사고, 돌고래호(낚시어선) 사고</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안전 규정 위반 집중 단속을 통한 해양범죄 및 규정 미준수 관행 개선</li> <li>○ 해양안전저해 범죄 유형 분류 및 관련 수사기법 개발</li> </ul>	국민 안전
18	어선 등 선박의 안전관리기준 강화 (해수부)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법」상 어선 복원성 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 미흡으로 검사 업무 등 차질</li> <li>○ 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 제외된 500톤 이상의 해상운송사업 비등록 선박은 국제항해 제한</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의 복원성·만재흡수선 기준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 개정</li> <li>○ 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대상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으로 확대</li> </ul>	국민 안전
19	식품·수산물의 위생안전관리기준 위반 등 근절 (식약처, 해수부)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염' 표시기준 없어 '저염' 제품의 표시가 어렵고, 소비자는 어떤 식품이 저염 제품인지 알기 어려움 발생</li> <li>○ 얼음막을 이용하여 냉동수산물 중량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행위 지속 발생</li> <li>○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94년~)에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 위반행위 지속 발생</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염' 표시기준 마련을 통해 '저염' 표시제품 유통·판매 활성화 및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강화</li> <li>○ 냉동수산물의 실제 중량을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위반행위자 처분 강화 관련 법 제·개정</li> <li>○ 원산지 위반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위반업체 단속 강화</li> </ul>	국민 안전
20	신종마약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세청)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고 남용 계층이 학생, 주부 등 일반인으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li> <li>○ 마약류 남용에 따른 막대한 국가·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안할 때,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공급 원천차단이 매우 중요</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정비를 통한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밀수 원천 차단</li> <li>○ 마약류 밀수 유형별 맞춤형 특화단속체계 확립</li> <li>○ 국·내외 마약단속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정보교류</li> </ul>	국민 안전
21	선박·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상서비스 지원 강화 (기상청)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정보 수요자인 어민, 선원들의 기상청 정보에 대한 인식부족 및 민원사례 발생</li> <li>○ 저고도 항공기상정보의 활용도 부족으로 항공기 안전 지원 미흡</li> </ul> <p>&lt;정상화방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중심 기상정보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지원</li> <li>○ 유관기관 보유 기상정보 공유를 통해 항공기상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li> </ul>	국민 안전

**붙임 4**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종료 과제(안) [21개]**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1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기재부)	○ 국정과제 '135. 공공기관 개혁'과 중복
2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행정지출 효율화 (기재부)	○ 핵심개혁과제 '2.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 보조금 개혁'과 중복
3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방지 및 예산낭비 근절 (중기청)	○ 국정과제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의 세부과제와 중복 (4-6.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정보전달체계 개편)
4	원전비리 근절 (산업부, 원안위)	○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13.6, 국조회의)을 통해 고강도 제도개선을 추진·완료하였으며, 「원전감독법」 제정·시행(15.7)으로 원전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체계 마련·시행
5	철도산업·공항건설 비리 근절 (국토부)	○ 철도관련 14개 운영기관 및 인천공항공사의 계약관련 내부 규정 개정 완료(14년) * 입찰 제한제도, 사전등록제 도입, 검증시스템 강화 등 ○ 인천공항공사 '청렴·윤리실천 종합대책' 마련(14.6), 하도급 공정 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지킴이' 구축 완료(14) ○ '15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여 철도산업, 공항건설 비리 ZERO 달성
6	KOSIS 등재지연 등 통계법 미준수 행위 개선 (통계청)	○ 종합적인 통계조정활동(합동기획·지도점검, 수시 모니터링) 및 KOSIS 입력 방문지원, 교육 등을 통해 '16년 중앙행정기관 현행화율 목표치를 '15년에 조기 달성 * '15년 현행화율: 94.0% ('15년 목표 : 90.3%, '16년 목표: 92.7%)
7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권익위)	○ 공익신고 대상법을 확대, 내부신고자 특별보호, 이행강제금 제도, 양벌규정 도입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완료(15.7.25. 공포, 16.1.25. 시행) ○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불복소송시 집행정지 제한 등 부패신고자 보호강화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자체과제로 이관하여 지속 추진
8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조달청)	○ 신규과제 '1.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포함 추진
9	공급자 중심의 행정용어 정비 (행자부)	○ 국민중심의 행정용어 발굴 국민공모 및 용역을 실시하여 공급자 중심의 행정용어(10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확산
10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여가부, 인사처, 국방부)	○ 공직사회 성폭력 범위에 대하여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완료 *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4.9. 시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8.19. 시행),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9.16. 시행) ○ 성폭력 범죄 벌금형까지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 * 교육공무원법(16.1.27. 시행), 국가공무원법(12.24. 시행), 지방공무원법(12.29.시행), 군인사법(16.1.19. 공포, 4.20. 시행 예정)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11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근절 (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훈급여금 지급 시스템과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을 연계하여 사망자 실시간 확인으로 부정수급 차단</li> <li>보훈급여금 주간결산제* 및 집중회수기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단위로 신규 및 신상변동자 기록을 확인하여 과오급금 발생 방지</li> <li>**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월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과오지급금 미회수집중 회수</li> </ul> </li> </ul>
12	미납추징금 환수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자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하여 추징 집행할 수 있는 특례 신설 등 「범죄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14.11.19)</li> </ul>
13	개인정보 유출 근절 (행자부, 금융위, 미래부, 방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과제 '81. 개인정보 보호강화'와 중복</li> </ul>
14	은행 꺾기 관행 개선 (금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 등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완료('14.2.11) 및 이행실태 점검 시행('15.3)</li> </ul>
15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관련 불합리한 절차개선 (복지부,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 과오납금 직접 반환을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4.10.15) 및 시행('15.4.16)</li> <li>「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14.10월 국회제출)</li> </ul>
16	식품 영세 업체의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완료('15.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매출규모에 따라 식품위생 위반 과징금 산정·부과방식 개선</li> </ul> </li> </ul>
17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관행 근절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과제 '91. 식품·수산물의 위생안전 관리기준 위반 등 근절'과 통합</li> </ul>
18	농식품 부산물의 자원화로 낭비근절 (농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식품 부산물 활용시 기존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 완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5.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관리법 개정은 '16년 완료 예정</li> </ul> </li> <li>부산물 재활용 기술 지속 보급 및 권역별 부산물 유통센터 확충</li> </ul>
19	사업주 기간제 근로자 간 비정상적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 (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제 근로자 단기계약 반복갱신 제한 관련 「기간제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 통과에 주력 발표('16.1.13. 대국민담화)</li> </ul> </li> </ul>
20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계 구축 (안전처, 경찰청,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발생 시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관련 '표준운영절차' 마련 완료('15.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역통제, 공통주파수, 호출부호, 개별임무 규정 및 기관통합 상황별 합동훈련 실시</li> </ul> </li> <li>소방헬기 관제시스템 구축('16.3월) 등 기관별 IT시스템(중합관제) 설치 완료 및 통합운영 실시</li> </ul>
21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안전 진단시스템 개통('15.7.29) 및 광역·기초 단체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등급) 산출·공개('15.11.4)</li> <li>229개 시군구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 실시('16.1.1)</li> <li>안전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안전지수·생활안전지도 지속 지원</li> </ul>

**1. 공공부문 개혁**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및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추진
  - 부채감축 대상기관(39개) 부채 13조원 감소(510.6→497.6조), 부채비율 6.0%p 개선(222→216%) 등을 통한 국가 신용등급 상향\*
  - 공기업부채 감축 등 지방공기업 구조 개혁\* 추진
    - \* ▲지방공기업 부채 감소('13년 73.9→'14년 73.6조원) ▲지방공기업 통·폐합 (21→8개) ▲부채비율 매년 10%p씩 감축('14년 150→'17년 120%)
- 공공기관 민원회피 행태 개선
  - 3회 이상 기관간 반복이송 민원 4만여건을 신속히 조정, 평균 접수기간을 단축(4.75→ 2.37일)하여 공공기관 민원회피 행태 개선

**2. 법질서 세우기**

- 보조금 부정수급 적극 단속을 통한 재정누수 최소화
  - 국가보조금 비리사범 단속실적 전년대비 147% 증가 및 보조금 관리·감독 기관에 부정 수금액 약 840억원 환수 조치 통보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실효성 강화 및 농업 난방용 면세유 중 경유를 제외하여 약 5천억원의 농업보조금 감축효과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불법행위 단속강화
  -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사행성 게임장 등 적극 단속·검거
    - \* ▲조직폭력배 3,160명(전년 대비 74.3%↑) ▲사이버금융사기 10,917명(전년 대비 27.3%↑)
  - 보이스피싱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 등으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감소 추세('15.3월 1,002건→'15.12월 291건)

### 3.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불합리 개선
  - 자동차 토털이력정보시스템 구축('15.10월)을 통해 차량 이력정보 조회가 가능해져 중고차 구매자들의 피해 사전예방
  -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이용자간 차별 해소 및 요금할인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혜택 확대
-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정상화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중소협력사간 결제관행을 개선, 2·3차 협력사의 안정적 거래환경 조성
  -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홈쇼핑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여 납품업체의 거래안정성 제고

### 4. 국민안전

- 생활안전정보 통합·공개 및 긴급신고 전화 통합 확정
  - 분산 관리되고 있는 생활안전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별 안전지수(지자체 안전수준 비교)'와 '생활안전지도'로 통합·공개
  - 긴급 신고전화를 현행 20여개에서 3개(재난119, 범죄112, 민원110)로 통합하는 방안 확정('15.1월)
- 국가기관 헬기 통합운영체계 구축
  - 국가기관 헬기 공동 활용 표준운영절차 마련·시행('15.7월)으로 긴급 상황시 국가헬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체계 구축